

“전남특별자치도, 특별권한 받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

김지사, 정례조회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취지 강조 국립의대 공모 공정성·국회 예산심의 추가 확보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시사의 발전 사업 허가 권한이 3000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김 수출 급증에 따른 양식장 확대 역시 정부에 끈질긴 건의 노력 결과 외해시협양식, 신규 김합성처리제 효능실험 등의 논리로 어렵게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방산단을 개발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 권한에 많이 막혀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반면,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장관 등 주 정부에서 과격한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위원회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

리에 대해 김 지사는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 김 지사는 “최근 가짜뉴스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청 가족들부터 확실히 숙지에 자신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그는 “공모 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위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하도록 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 때도 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공모사업에는 응하면서 전남도가 하는 공모사업엔 응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정부의 초긴축 기조 속에서도 정부예산안에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8천988억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면 최소 3천억원 이상을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김 지사는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하고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도청 주요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노력으로 에타를 통과하고 내년 예산도 확보했다"며 "향후 추진할 광주-영암 아우토티안 등 다른 고속도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남 SOC 사업이 대폭 감소할 뻔 했는데 다행히 사업이 진행되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를 지속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재정 기자

송암산단에 車부품 재제조 특화단지 구축

광주시, 국비 450억 투자 구상...에너지밸리산단엔 R&D단지 조성

광주시가 송암산단과 에너지밸리산단에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반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둘째 날인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재제조 순환 경제허브 기술포럼'에서 '광주 자동차 부품 순환 경제 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 정진욱 의원실과 광주그린카진흥원이 함께 주최한 기술포럼에서는 탄소배출에 따른 환경 문제와 자동차 내연기관 종료에 대비해 중고차 부품 수급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허브'는 송암산단의 자동차 정비업체와 모빌리티 도시 재생 사업을 연계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 특화단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에너지밸리산단에 재제조 성능 평가 및 인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 지원을 하고 재제조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약 450억원의 국비를 받아 송암산단에 수거·분해·분류·선별할 수 있는 플랫폼, 부품 재제조 생산업체,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등 재제조 부품 생산 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제조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35개 창업, 직접 고용 170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경정비(카센터) 1천곳 가운데 50%인 500곳을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로, 판매 가격을 신제품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에너지밸리산단에는 성능 평가 R&D 단지를 구축, 자동차 부품 재제조 성능 평가 지원과 재제조 기법 R&D 지원에 나선다.

향후 완성차 업체로 참여가 확대되면 광주시는 자원 소비 90% 감소, 고공 27배 증가, 경제 효과가 높은 '자동차 생애주기 완성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정부 지원의 선도 사업으로 송암산단에 재제조 1단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완성차 참여를 유도해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사업의 모델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업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민주 곡성군수 후보 6-7일 '100% 국민경선'

일부 후보자들 반발...정환대 전 도의원은 탈당키로

10·16 곡성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는 6-7일 이틀간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곡성군수 경선 대상자를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 유근기 전 곡성군수, 정환대 전 전남도의원,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 등 4명으로 확정하고 오는 6-7일 이틀간 100%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중앙당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날 후보자 등록 공고를 냈다.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였던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의 복당을 결정하고 재선거 예비후보를 4명으로 늘린 바 있다.

무소속 후보 복당에 이어 영광군수 재선거(당원 50%+국민 50%)와 달리 100% 국민경선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반발하고 있다.

정환대 전 전남도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다. 정 후보 측은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도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당원을 배제한 경선 규칙을 결정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후보 단일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기 전 곡성군수는 "경선 규칙이 불합리하지만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규칙에 따르며 경선을 완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박성=김영필 기자

문화예술 Master Class

2024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예술 특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실력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준비한
광주 시민대상 문화예술 특별 프로그램

광주 메세나 기관 및 기업의 CEO들과 최고의 문화예술 전문가가 만나 창조적 즐거움을 느끼는 예술 체험 특별 프로그램!



교육기간
2024년
10월 5일~12월 7일
(매주 토, 월요일 중 하루씩)

교육시간
토 14:00~16:30 무 지 켄
토 17:00~19:30 패 선
월 18:30~21:00 인물사진
(10주간 10차시 총 25시간)
단, 마지막 날은 Arts festival

교육방법
종합 예술 강의 및 실습

모집인원
과정당 20명 내외

수강료
과정당 30만원
*20%할인혜택대상
학생, 사회적약자대상자, 2차경 이상 동시등록자

교육장소
광주교육대학교
창의융합관 ai-Aiarttech

모집기간
2024. 9. 1. - 10. 2.
(오전 10시~오후 5시)

신청방법
전화, 방문 또는 웹사이트 내 수강신청
<http://mc.gnue.kr>

문의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원 행정실
062-520-4283